

해양항만과	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적극 대응으로 안전하고 청정한 경남 바다 조성 소비촉진 및 수출지원으로 수산물 내수성장 및 수출 확대
성 과 요 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종합 대응 ⇨ <u>도민안심 강화 기반 구축</u> ◦ 수산물 소비 활성화 수출 지원 ⇨ <u>소비촉진 우려 해소 내수성장 및 수출 역대 최고 달성 전망</u> ◦ 지방관리항만 항만시설사용료 세입기관 변경(국가→도) ⇨ <u>100억원 규모 세수 확보</u> ◦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천원제 도입 ⇨ <u>섬 주민 이동권 보장, 주민편의 제고</u> ◦ 「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」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천 광포만 갯벌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⇨ <u>어업유산 및 해양생태 관광 자원화 기반 마련</u>

□ 추진개요

-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하여 道 종합대책 마련·추진
- 촘촘한 방사능 안전 감시망 구축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도민 안심 강화
- 지방관리항만 항만시설사용료 세입기관 변경, 100억원 규모 세수 추가 확보
-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등 도민 편의와 안전 제고를 위한 신규시책 적극 발굴
- 수산물 수출 목표 역대 최대 달성 전망, 어업유산 및 해양생태계 자원 활용

□ 추진실적

-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선제적·적극적 대응 및 종합대책 발굴·추진
 - 방류 전 상황별 대응반, 방류 후 합동 대응 상황실 운영 등 종합대응체계 구축
 - 5개 분야 종합대책 수립·추진(촘촘한 방사능 안전감시망 구축, 수산물 유통단계 안전 강화, 도민 참여 및 소통 강화, 수산물 소비촉진 및 위축 대응)
 - 수산물에 대한 어업인, 수산업계 상인, 도민 안심강화 기반 구축 (방사능 안전 도민 안심 및 수산업계 피해지원 강화,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촉 확대 등 3개 분야 추가대책 수립·추진)
- 촘촘한 방사능 안전 감시망 구축으로 지역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도민 안심 강화
 - 도내 삼중수소 분석장비 최초 도입(1대)
 - 도내 해역 해양 방사능 조사정점 확대(5개소→23개소)
 -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·시행(주 20건→40건), 결과 공개(주2회→매일)
 - 수산물 위판장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(10대)
 - 수협 위판장 방사능 분석 장비 설치 지원 지속 건의(해양수산부) 등
 -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(연 4회→매일),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명예감시원을 도입·운영(18개 시·군, 60명)

- 도민 참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·확대(월 1회→월 4회)
- 광역지자체 최초 수산물 방사능 검사 유튜브 채널(경남TV) 생중계 실시 (도민참관행사 7회, 생중계 6회), 도민 수산물 안전 홍보(설명회 10회, 홍보물 15천부 배부)
- 지방관리항만 항만시설사용료 세입기관 변경, 연간 100억원 규모 지방세수 확보
 - ‘지방일괄이양법(21.1.1.)’ 시행 이후에도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사용료의 관행적 국가 세입 징수 부분을 지속 건의(법률자문, 자체 검토, 중앙부처 협의 등)로 개선(세입기관 국가→지자체(도)로 변경)
 - 지방관리무역항(6개소) '24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 지방세수 추가 확보
- 도내 선박 안전성 강화 및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지원(신규정책 발굴)
 - '24년 신규,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유치(정부예산안 3억원 반영), 도내 어선·선박검사 전문화·시스템화 통해 안전성 강화
 - '24년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천원제 신규 도입 및 제도적 기반인 경상남도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개정
-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및 수산물 수출 목표 역대 최대 달성 전망
 -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 대응, 선제적으로 예비비(16억원) 편성, 전국 지자체 최초 쿠팡, 컬리, 이마트 등 대형 유통 플랫폼 기업과 MOU 체결 및 수산물 온·오프라인 소비촉진 기획전 추진
 - 삼성중공업, 한화오션 등 도내 대기업과 협력, 기업 구내식당 지역 수산물 납품 추진, 약 22억 7천만원 정도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
 - 수산물 day 운영, 국회 대규모 수산물 판촉전 등 지역행사 축제 지원
 - 야놀자와 지역 여행 연계 문화관광형 시장(10개 시장) 수산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시책 발굴·추진으로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안정 기여
 - * 온라인 기획전 결과 : 쿠팡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6.5% 증가(39억원 매출), 컬리 매출 전년 동기 대비 73.3% 증가(66억원 매출 달성), e-경남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72.4% 증가(22억원 매출),
 - 10월 현재 '23년 수출 목표액 2억 5천만불 87.9% 달성, 역대 최대 수산물 수출 달성 전망

○ 어업유산 및 해양생태계의 관광 등 자원화 기반 마련

- 국내 어업분야 최초, 전 세계 어업 분야 세 번째 「하동·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」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확정('23.7.)하여 전통 어업 문화의 브랜드화로 고부가 가치 창출과 경남도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
- 도정 과제인 해양보호구역 확대(3→4개소, 사천 광포만 갯벌(3.46km²) 연안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, '23.10.), 우수 해양생태지원관광 활용 기반 마련

【 기타 주요 추진성과 】

- 지역 국회의원 건의 등을 통한 정책 현안 해결 근거 법률 발의, 법령 개정(2회)
 - 수산업계 지원을 위한 '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' 지정 관련법 개정 건의(산자부, 해수부)
 - ▷ ('23.8.) 수산업계 포함된 「지역산업위기대응법」 개정안 발의(최형두의원 등 10인)
 -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대상에 도내 주요 양식·어획 품목 포함 건의(해수부)
 - ▷ ('23.10.)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내 주요품종(양식물 포함) 수매 가능
- 정어리 폐사체 발생 처리 대응 및 '정어리 폐사 대책 마련' 건의(도, 창원시→ 해수부)
 - 창원시와 협력, 정어리 폐사체 발생 처리 대응('23.10.11.~15.), 정부 대책 마련 건의('23.11.17.)
- 중앙부처 경남 현장방문 수행, 정책현안·국비 건의(11회)
 - 해양수산부 장관·차관 해양수산현장 방문 4회('23.6.21. / 7.14. / 8.8. / 10/27. / 11.17.)
 - 국회의원 방문 정책현안 및 국비 건의 4회('23.6.13. / 9.16./ 10.11. / 11.20.)
 - 기획재정부 방문 국비 건의 1회('23.7.28), ▪ 중앙-지방정책협의회 정책 건의('23.9.6)

□ 주요 성과(결과)

-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종합 대응 추진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,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 해소로 수산업계 지원, 방사능 감시망 구축으로 도민 안심 제고
- 지방관리항만 항만시설사용료 세입기관 변경으로 1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추가 확보 및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재정적 동력 마련 기여
-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천원제 도입,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유치로 섬 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도민 편의, 안전성 제고
- 10월 현재 '23년 수출 목표액 2억 5천만불 87.9% 달성, 역대 최대 수산물 수출 달성 전망
- 어업유산 및 해양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
-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개정으로 도내 주요 품목(양식수산물) 수매 가능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양식수산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